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년 10월

국회의원 이정선

제 출 문

국회의원 이정선 귀하

본 보고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0월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I. 시작글	1
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2
1. 개념	2
2. 주요 원칙	3
I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
1. 현행 제도의 현황	5
2. 외국의 사례	17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19
I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21
1. 개선과제	21
2. 개선방안	25
IV. 맺음말	29
참고문헌	30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I 시작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느냐와 서비스수요자의 만족도가 중요하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의 만족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울러 제한된 자원의 배분 문제로 인하여 중복과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복지행정 전달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공급자 또는 행정가 편의 중심의 전달체제로 편향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언제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는 UN장애인10년에 이어 1992년에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을 선포¹⁾하고 동 10년 동안 장애인복지 관련분야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제시하였는 바, 그 중에서 개별적 장애인복지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의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추진을 결정하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98~’02)계획을 1997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 관련부처간의 업무의 협조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하였고, 이것이 2007년 4월 법개정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시행해본 결과 1년에 한두차례 열리는 요식적 회의체기구로서 실제적인 장애인정책간의 연계 및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이

1)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1992년 4월 17일에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러한 형식적인 회의체기구로서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200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한나라당 정부가 향후 5년간 실천할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점추진과제로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를 내세우면서 ‘장애인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해서 서비스 전달 효율성 확보’라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해주고 생활상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전환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는 동일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늘어나는 단순논리로 볼 것이 아니다. 무엇이 실용적이고 국민에게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와 원칙,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개념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계(organizational arrangements)를 말한다(Gilbert & Spect, 1986: 119). 또 복지대상자 측면에서는 그를 둘러싼 공적·사적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간의 서비스 전달망을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Friedlander & Apte, 1980: 181), 또 복지서비스의 공급자간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체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논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체계, 공공부문 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체계, 그리고 전달체계 내부조직화 문제 등으로 진전되어 왔다(김용득·유동철, 2005: 190).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무관할 수는 없으나, 서비스대상자의 포괄성과 서비스내용의 다양성 등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담당정책부서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어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구별되어야 할 또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고 이해하여야 한다.²⁾

2)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교육·직업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

2. 주요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기능분담의 원칙

전달체계는 상부체계와 하부체계 그리고 상부와 하부를 연결시키는 중간체계가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부체계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인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주기능이 정책결정과 관련되는 계획과 통합조정기능을 수행하며, 중간체계인 시·도 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감독과 기획 및 지도를 하는 책임기능이 중심이 되며, 하부체계인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서비스제공기능을 주로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체계상의 적절한 기능분담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2) 전문성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는 비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행정의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행정 구조는 전문가의 권위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전문행정의 구조는 위계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위계질서가 관료주의적 서열이 아닌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유지되고 전문가 각자의 개별적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

3) 접근용이성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적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지리적인 장애의 제거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소외의식이나 차별대우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상적인 전달체계는 복지대상자의 복지기관에 대한 접근과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잠재적인 복지대상자까지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가 담당하며, 주택서비스 및 교통정책은 국토해양부, 체육·문화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정보화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서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연금제도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등이 담당부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복지서비스 문제는 단순한 특정부서의 복지서비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치는 포괄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통합조정의 원칙

장애인의 욕구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또한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서비스기관이 각기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서비스 효과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과 전문가의 선정, 장애인복지의 계획과 자원의 배분 그리고 업무 수행시에 관계기관과 관계자들간의 협조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5) 지역참여의 원칙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 문제는 공식적인 전달체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공식적 전달체계에 의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동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원의 동원이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아울러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6)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 목표의 원칙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립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사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 및 직업생활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달체계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크게 보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로 구별해볼 수 있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구별

되는 특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선서비스기관으로서의 민간부문과 연관하여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문제도 중요한 향후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제도의 현황

1) 법제도상의 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제가 개별법으로 처음 제정된 것은 1977년의 「특수교육진흥법」(1979년 시행)이라 할 수 있다. 그후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그해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보장법’으로 약칭)이 만들어지는 등 그후 200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 현행법률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장애인 관련 현행법률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장애인복지법	198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노동부
장애인·노인·임산 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보건복지 가족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국토 해양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005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 기업청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 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함.	보건복지 가족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	교육과학 기술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	보건복지 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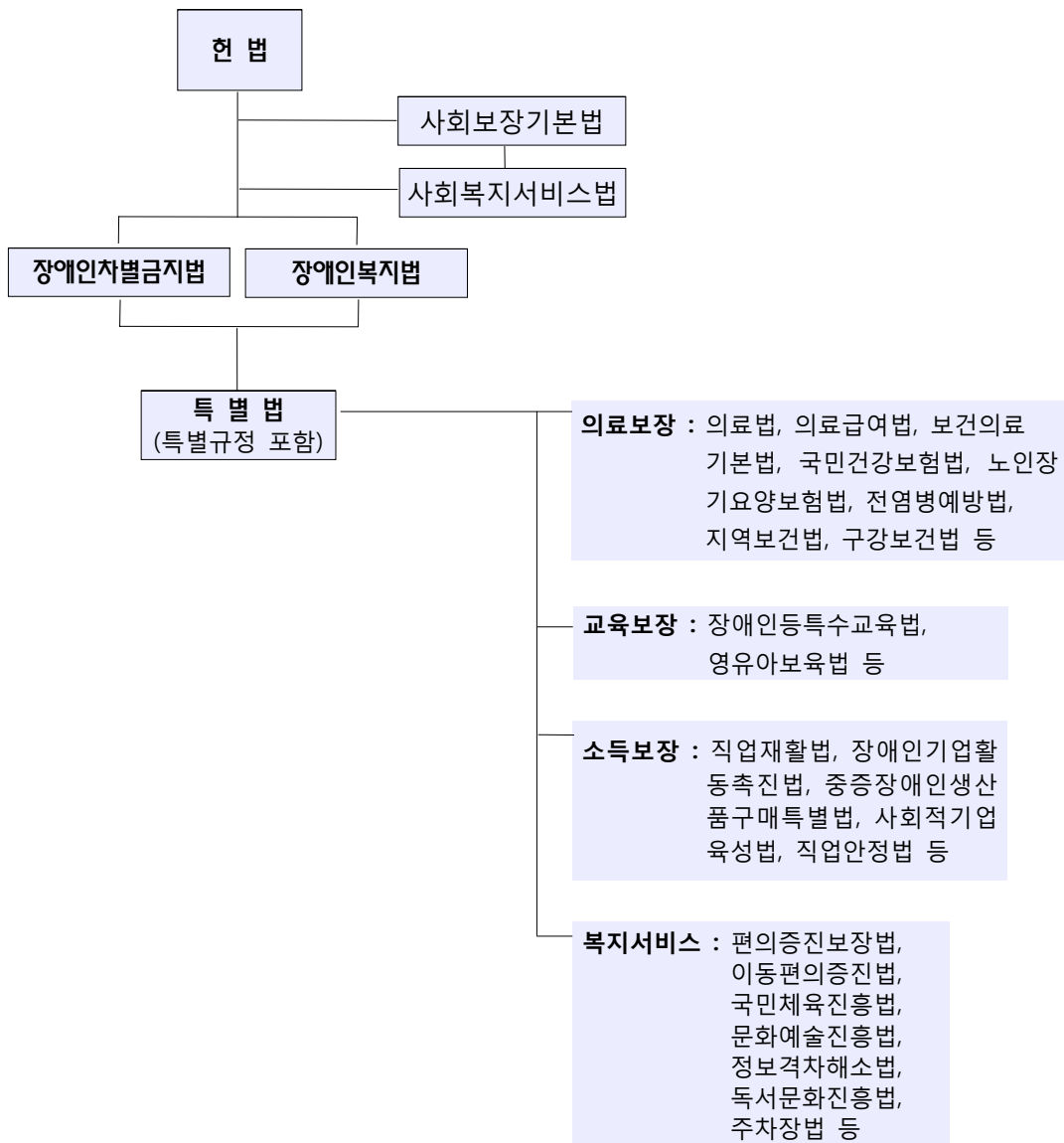
이들 현행법제들은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헌법상에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권들을 실현하
기 위한 실정법에 해당한다.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과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장애인 인권보장규범과 장애인 급
부규범의 기본법(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실정법이다. 이와 더불어 그 외의 다양한 장애
인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률간의 체계적인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를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보장규범에 해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
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
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8조).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전달체계는 장애
인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주
요 체계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법무
부, 법원이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이 중 법원은 일반
적인 사법적 기능을 하는 최후의 인권수호기관으로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
상이나 벌칙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과 더불어 차별행위 중지 등의 적절한 구
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가지며, 이 명령을 정
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또 독립된 별도의 국

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사실상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차적 행정전달체계에 해당하며, 법무부장관은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행하는 2차적 행정전달체계에 해당한다.



[그림]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2) 「장애인복지법」의 전달체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이며 일반법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중앙부처로서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상의 특별한 공적 전달체계로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정책위원회** 등이 있다. 복지서비스조치의 주체로서의 행정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은 일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특별법상의 전달체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으로 약칭)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무부서인 중앙정부기관은 노동부이다. 직업재활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 공법인으로서 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치되어 있다.

편의증진보장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으로 약칭)은 기존의 편의증진보장법상 미비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증진보장법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권(이동권 포함)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 및 사회참여 활동을 실현시켜주는 사회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편의증진보장법의 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용 등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로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재가장애인들의 창업 지원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세금감면, 판로지원 등을 행한다. 다만 소기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10인 미만인 기업)은 장애인 고용 30%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리목적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주무부처임)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며,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훈련·연수·인력·연구·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시·군·자치구에 설치한 교육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전달체계

(1) 보건복지가족부 등

우리나라에 있어 장애인복지업무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이지만, 직업재활, 고용 및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부,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장애인 관련부서가 있으며, 그밖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국토해양부, 정보접근권 보장은 행정안전부 등 업무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 관련업무는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기 담당 주무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장애인 업무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업무 처리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8월에 발표된 현행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분야별로 5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는 소관부처가 중앙 8개부처 및 5개 청·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립재활원 등)로 되어 있다. 이들 대표적인 소관부처의 업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4실·4국 체제로 조직되어 4국 중 하나인 장애인정책국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국은 장애인복지와 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부서로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의 3개 과를 두고 있다. 각 과별 업무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장애인정책과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장애인권익지원과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1.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12.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4.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8.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자립기반과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한편 장애아동 보육관련 업무는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보육정책관 내의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맡고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에서 본 것처럼 특수교육법의 주무부서로서 교육복지국 내의 **특수교육지원과**에서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과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수립
-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지원
- 장애영아교육 지원
-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
-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국립특수학교·병원학교의 운영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지원

③ 노동부

노동부는 직업재활법의 주무부서로서 산하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두고 있다. 노동부에는 고용정책실 고용평등정책관 소속의 **장애인고령자고용과**에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 및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지원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3조).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 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이동편의증진법의 주무부서이지만 이 업무는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내의 교통안전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외에도 장애인 주택서비스 업무와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업무도 관장하고 있어 여러 실무부서에 관련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업무 : 교통정책실 - 종합교통정책관 - **교통안전복지과**
- 장애인 주택서비스 업무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거복지기획과**
-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업무 : 교통정책실 - 철도정책관 - **광역도시철도과, 철도기술안전과**

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문화체육 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체육국 내의 **장애인문화체육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팀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 장애인 문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문화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장애인 문화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 일반종목 중 빙상·봅슬레이 스키·루지·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소프트볼·스쿼시·인라인롤러·댄스스포츠·오리엔티어링 종목에 관련된 업무

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의 주무부처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 인식제고 및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담당 실무부서는 정보화정책실 정보화기획관 내의 **정보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업무와 관련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있다.

⑦ 여성부

2008년에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여성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업무로서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권익증진국 내의 **인권보호과**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업무는 권익증진국 내의 **복지지원과**와 여성정책국 내의 **인력개발사업과**의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다.

⑧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같은 장애인들의 지원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복지증진국 내의 복지정책과가 실무부서이다.

⑨ 기타 공공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 노인 등의 방송접근권 보장 관련업무
- 중소기업청 :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업무
- 국립재활원 :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관련업무
- 경찰청 :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관련업무
- 금융위원회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관련업무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조정 기능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도가 생겼다. 또 중앙관련 부처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 생긴 회의체기구로서 200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회의체 심의기구로서,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①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②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③ 정책이행의 감독·평가이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항).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2항).

-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②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③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⑥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⑦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⑧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또한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여는 형식적인 운영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어 과연 통합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제1항).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②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러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장애인정책 실시에 있어 민주적인 지역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2. 외국의 사례

1) 스웨덴

스웨덴은 중앙정부에 장애인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중앙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각각 장애인 관계의 위원회를 두고 장애인 정책을 감독·평가하며, 각종 장애인 단체들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이슈들을 감시하고 법의 문제점이나 결함에 대하여 정부에 로비활동을 하는 장애인 옴브즈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 재활복지관련 주무부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일원화 되어 있고,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재활서비스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약칭 OSERS)을 두고 있다. OSERS는 특수교육 지원과 총체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OSERS는 그 산하에 특수교육프로그램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s: OSEP), 재활서비스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 국립장애재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Research: NIDRR)의 조직을 두고 있다.

OSEP는 생후부터 21세까지의 장애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의 무상 공교육 프로그램 관리와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RSA는 상담이나 의료 및 심리서비스, 직업훈련, 기타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고용되고 직업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NIDRR은 장애인의 재활복지와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렇게 미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핵심조직인 교육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면서 각 주정부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높게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에 있어 장애인시책에 있어 주요 부처는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관련부처들이 장애인시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장애인시책에 관한 종합조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총리부이다. 특히 1996년에 총리의 비서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내각관방성(국무조정 역할 담당) 안에 장애인시책의 중 적 기획입안을 맡는 부서가 만들어져 각종 장애인시책을 제휴하여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인정받고 있다.

4) 호주

호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는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FaCS)이다. FaCS는 연방/주정부장애협정(Commonwealth/State Disability Agreement)에 의거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입안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다. FaCS 조직에는 3개의 장애인복지부서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 중 장애담당관실(Office of Disability)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방/주정부 장애협정에 대한 관리기능과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aCS의 산하기관으로서 센터링크(CenterLink)는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센터링크는 1997년에 설치되어 복지와 고용에 대

한 공공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센터링크는 one-stop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1차 접수·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영국

영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가 1999년에 장애인권리위원회법(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대체되어 장애인 차별 구제에 대한 행정적 구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위원회는 장애인차별해소를 위한 업무, 기회평등촉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및 개정 관련 정부에 대한 제안과 조언, 연구·정보제공 관련 사업의 수행 및 지원 등을 행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며, 조사과정에서 불법적 차별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차별금지통지, 차별금지 사항의 권고, 차별금지 이행계획서의 제안, 기타 차별피해자에 대한 법적 자문과 지원 등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6) 평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각 나라마다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건 다양한 장애인정책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실시될 수밖에 없으며, 통합과 조정 역할을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로 부여하느냐 역시 어느 정책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보건대, 장애인정책의 핵심영역은 교육과 고용이며, 교육 및 고용서비스 부문에 어떻게 일반서비스를 결합시키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중앙정부의 공적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간의 상호연계성이 미흡하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정책의 사안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주무부처가 다 양하므로 이에 대한 상호연계성이 필요하다.³⁾ 이러한 역할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1년에 몇 차례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정책간 연계를 이끌어 낼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한편 장애인복지조정의 역할을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다. 단순히 장애인정책의 소관 비중이 높다고 하여 각 부처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총괄·조정한다는 것은 부처간 위계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순 취합적 기능에 머무르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설계가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들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전달체계 내에서 파편화된 정책 내용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그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보았듯이 이 위원회는 ①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②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③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회의체기구의 한계성으로 인해 상시적인 조정 및 감독·평가 기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이것이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등록 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들에 대해 어떻게 행정체계가 연계하여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과 사례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신이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의 종류와 소재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를 수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처럼 욕구와 자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따라서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 역시 통합적이고 단일화된 전달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의 부재로 인하여 자원투입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

3) 현행 중앙 관련부처로는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지원), 교육과학기술부(특수교육), 노동부(장애인고용), 지식경제부(장애인기업, 재활복지산업), 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체육 및 문화), 국토해양부(이동권 보장), 여성부(장애여성문제), 행정안전부(장애인정보화사업), 법무부(장애인차별시정), 기획재정부(세제혜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 이로 인해 자원분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통합·조정 of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역할이 미흡하다면 자원의 낭비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더 나은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III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개선과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과제로서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가 요구된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아동복지정책이나 노인복지정책과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그 정책 대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장애 범주로 인해 해당 장애에 따른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의 종류도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또 장애인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걸쳐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아울러 유엔 ESCAP의 권고를 참작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이 실제적이고 상설적인 조정기구가 되도록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초점은 조직적 측면과 함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기능이 확대되고 업무가 증가하면 이에 따른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장애인 차별금지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그러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앙정부 위치에서 정책설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모형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이 현상유지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실제적인 프로그램 수행은 지방정부가 맡는 역할 분담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전달체계 역시 이러한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각 시스템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지역사회 수준의 자원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최근 국가 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아울러 예산규모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의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 각 중앙부처에서의 장애인 관련 업무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거시적 조망이 전제된 전달체계의 재구축은 매우 시급하다. 결국 정책의 방향정립, 중앙정부간 정책연계 조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적 파트너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전달체계 개편방향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현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전달체계와 관련된 부분이 전향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폐지와 같은 후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부분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부분으로 나누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정부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①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②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③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의 3가지 기능 중 종합계획의 수립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으로 하면서,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심의와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 기능으로 한정하고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기능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현재 형식적인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놔두고 명목상 유지하면서 실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통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개정안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위원회가 운영 성과는 거의 없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 대신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지자체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측의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폐지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바, 첫째 운영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 둘째 지자체에 업무부담만 주고 있다는 점, 셋째 업무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부측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해봄과 동시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① 먼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의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타인의 의사를 수렴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와 평가도 받아야 하며, 또 전문가팀의 조언도 있어야 하는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최성재·남기민, 2001: 138). 이러한 위원회제도의 장점으로서는 (i) 문제에 관한 협조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데 효율적이고, (ii) 제안을 평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방법이 되고, (iii)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iv) 참여적·민주적 행정의 수단이 되고, (v) 관련된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구축할 수 있고, (vi) 행정책임자의 결정을 보조해준다는 점 등이다. 한편 위원회제도의 단점으로는 (i) 비용이 많이 들고, (ii) 문제의 처리 또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iii) 결정이 타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iv) 위원간의 책임성을 희박하게 하며, (v) 이해관계가 얽힌 대표의 참여에 의한 위원회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점을 든다(최성재·남기민, 2001: 140).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원회제도는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로 인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라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적인 참여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 수가 문제가 될지언정 위원회제도 자체의 유용성은 유효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도 위원회제도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역시 지역사회의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과정으로서의 그 유용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② 이렇게 유용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 주장대로 이 위원회가 운영 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폐지사유로 들고 있는데, 과연 타당한 이유인가 하는 점이다. 연혁적으로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1989년 12월 법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시작되어 1999년 2월 개정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도록 하면서 일시 없어졌다가 2004년 3월 개정시에 지방자치단체 모두(광역 및 기초단체 포함)에게 두도록 하는 필수

기구로서 재규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운영성과가 거의 없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맞는 지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성과가 거의 없게 된 이유가 이 위원회의 유용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더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함에도, 또 필수기구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설치안했다면 법규정을 위배한 직무유기가 있음에도 이러한 점은 도외시한 채 단지 운영성과가 없다는 결과적 현상만을 이유로 폐지함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위원회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활성화를 권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③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부담만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로 인해 폐지한다고 정부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면 다른 모든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가 하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 점은 도외시한 채 역시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복지행정과 정책집행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민주적인 참여과정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업무부담 경감을 이유로 한 위원회 폐지는 민주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④ 정부개정안의 위원회 폐지이유 중의 또 하나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들고 있다. 위원회제도의 단점으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원회제도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임에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라는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어 오히려 그 장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제도가 활용되는 것이다.

⑤ 정부개정안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이 위원회가 심의하던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개정안은 향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이는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현행법상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심의(장애인복지법 제13조)

이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중요사항을 다룬다고 볼 수 있지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한정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유용성은 앞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개정안은 진정한 민주적인 장애인복지행정에 역행하는 편의주의 발상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활성화를 권장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이야말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장애인정책 집행과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개선방안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개편방향으로는 사회복지접근의 용이성, 행정조직의 일원화, 행정의 통합화, 행정체계 단축화,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지역복지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사회복지의 연계망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아본다면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으로서 통합·조정 역할 담당의 상설기구 설치와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

현행법과 제도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방안은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무총리(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예컨대,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책추진단 등). 이 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인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관계부처간의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현행법상의 기능인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간 의견조정 및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을 실질화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위원회는 종합정책의 수립과 정책 집행간의 조정역할을 함으로써(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최소한의 기구로서 효과적·효율적인 장애인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③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현행법의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상설기구 전환으로 인해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과를 이 위원회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최소의 추가비용과 인력 투자로 시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토록 하여 조직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1) 상설기구화의 두 방안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기구 상설화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1안은 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국을 대신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이며, 2안은 보건복지가족부 내의 장애인 관련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장애인정책의 수립 및 통합·조정 등의 기능만 대신하는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이다. 각각의 경우를 검토해본다.

① 1안

1안은 현행 보건복지가족부가 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서의 역할을 폐지하고 새로운

주무부서를 국무총리(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면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다. 1안은 따라서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장애인정책국 예산과 인력을 그대로 옮겨 활용하자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제는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② 2안

2안은 현행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관련 업무 중에 장애인정책 전반의 기획·통합·조정 및 정책이행 감독·평가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장애인정책 주무부서로서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1안에 비해 그 전담상설기구를 슬림화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이 위원회의 상설화로 인해 이 기능에 상응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과 인력을 줄일 수 있다.

(2)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의 구성과 역할

1안 또는 2안이든 국무총리(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위원회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과 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국무총리 직속 상설기구인 (가칭)장애인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또는 차관급) 1인과 상임위원 2인(1인은 장애인으로 함)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운영한다. 위원장은 장애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상임 또는 비상임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역할과 기능

상설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1안 또는 2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안의 경우에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관련업무 전체를 포함하여 이관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관련 업무만을 따로 떼어 여기다가 통합·조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안의 경우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간의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업무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여 상설 위원회의 업무를 시작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설 위원회가 통합·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새로 도입된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기관의 장애인 관련업무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위원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정책책임관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통합·조정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전달체계 재정립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스템간의 연계와 협력체계의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담보해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가 중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는 회의체 자문기구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정책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창구 역할을 담당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1989년 말에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가 1999년 법개정시 국무총리소속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없어졌다가 2004년 법개정에서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현행법상 필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요식절차로 흐를 소지가 있으나, 지역사회의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서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즉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가지고서 법정신에 걸맞도록 운영되는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각 지자체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IV 맺음말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UN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여러 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국가조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을 하고(2008. 12. 2.) 지난 09. 1. 10.부터 국내에서도 발효한 「장애인권리협약」(2006. 12. 13. UN총회 채택, 2007. 3. 30. 한국서명, 2008. 5. 3. 국제적 발효)에서 제3조(일반원칙) (c)항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33조(국내이행과 모니터링)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독립적 기구 등의 법적·행정적 체계를 유지, 강화, 혹은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는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삶의 질 선진화와 생활공감 정책’을 표방하였다.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분야의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의 경우에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한 실천을 또한 다짐하고 있다.

금까지 장애인복지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분야였지만 최근 꾸준히 향상되어오고 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미시적인 정책 중심으로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과 낭비 등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해결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법은 국무총리직속의 별도의 장애인정책전담 상설기구를 만들어 부처간의 연계성과 통합·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감독·평가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 강혜규(2000).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동향과 쟁점,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김상균(1989).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복지대책안』, 장애자복지 대책위원회.
- 김용득·유동철(2005).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 김종인·우주형·이준우(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 김형식(1997). 호주의 최근 장애인정책, 한국아태장애인10년 연구모임.
- 나운환(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홍익제.
- 나운환 외(1996).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노기남(2006). 사회복지법과 공행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 박병식 외(2008).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책기획평 가원.
- 박옥희(200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오혜경(1999).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 이재완(2001). 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확충방안, 『사회복지』 가을호,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 장창엽·육주혜·최진·이계준(20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미국·일본·호주 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전용호(2003).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정동영 외(1998). 장애인 교육·복지실태 국제비교, 국립특수교육원.
- 최성재·남기민(2001).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 황상철(2000).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여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관계부처합동(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교육과학기술부 등.
- 장애인복지법(2008).
- Gilbert, N. & Spect, H.(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Friedlander, W. A. & Apte, Z. A.(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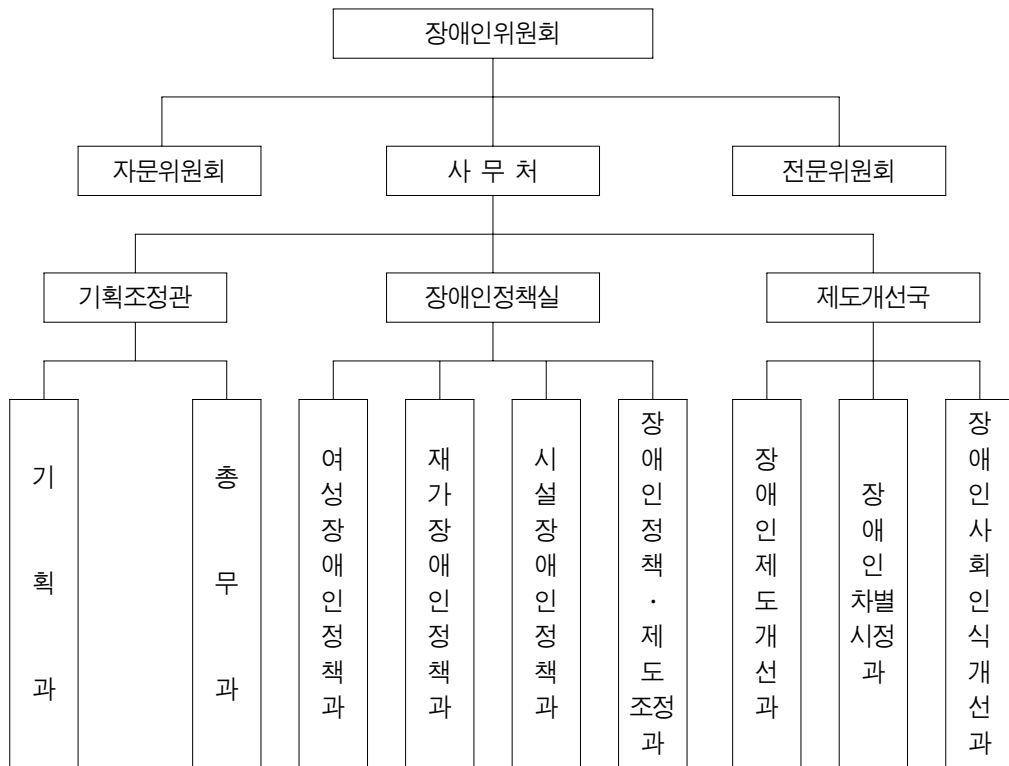
<http://www.centrelink.gov.au>

<http://www.ed.gov>

<http://www.facs.gov.au>

〈참고자료 1〉 17대 국회 한나라당 정화원이원이 발의했던 장애인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가. 조직도



나. 업무분장

- 위원장(장관급)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차관급) 2인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상임위원 1인 및 비상임위원 1/2이상 장애인 참여)
- 장애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중장기 장애인정책방향 설정 및 개발, 장애인에 관한 제도의 이행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장애인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함.

[표] 위원회의 인원과 업무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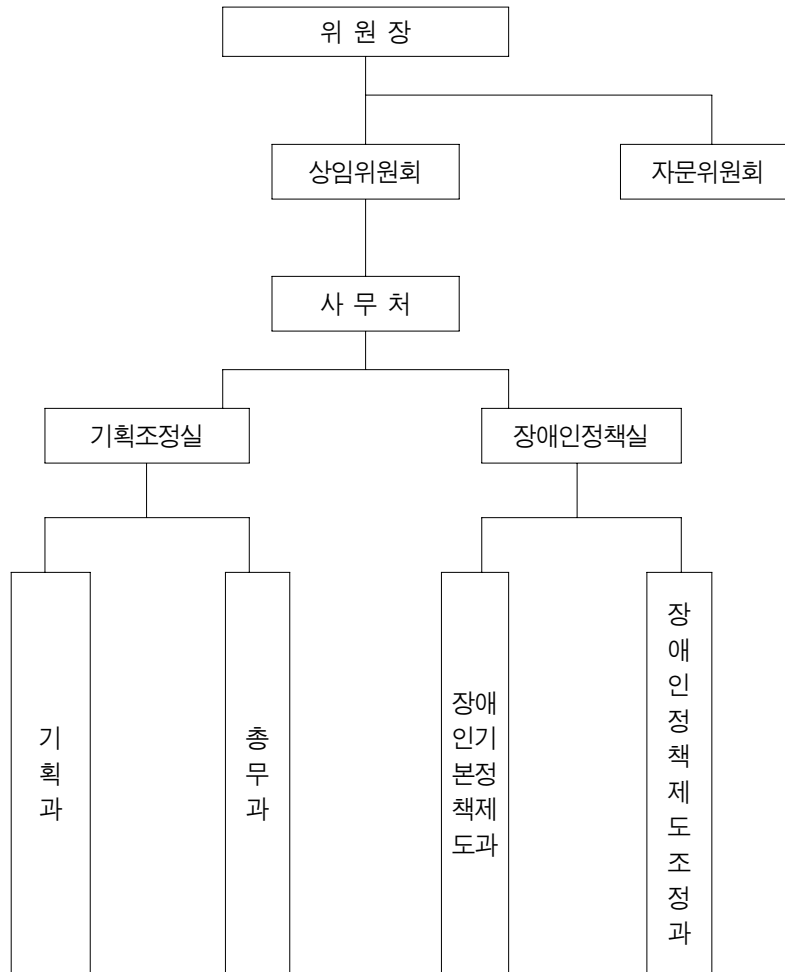
조직분장		업무분장	인 원
장애인위원회		위원회 업무총괄	4명 (장관급 1인, 차관급 2인, 비서 1인)
기획조정관	기획과	장애인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 조정	5명 (조정관 1인, 과장 1인, 과원 3인)
	총무과	조직관리, 인사, 교육, 감사, 서무, 예산, 회계	5명 (과장 1인, 과원 4인)
장애인정책실	여성장애인정책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6명 (실장 1인, 과장 1인, 과원 4인)
	재가장애인정책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5명 (과장 1인, 과원 4인)
	시설장애인정책과	시설장애인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5명 (과장 1인, 과원 4인)
	장애인정책 · 제도조정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장애인정책 · 제도 협의 및 조정	4명 (과장 1인, 과원 3인)
제도개선국	장애인제도개선과	장애인 애로사항 접수 및 제도개선 모색	6명 (국장 1인, 과장 1인, 과원 4인)
	장애인차별시정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 · 연구 및 제도개선 모색	6명 (과장 1인, 과원 5인)
	장애인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 전파 및 장애인위원회 업무홍보	4명 (과장 1인, 과원 3인)
합 계		-	50명

다. 비용추계

- 상기 조직 규모로 운영할 경우 첫해에 64억원 소요 추정.
- 실제로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구축소 및 조정 등으로 인해 직제운영방법의 여하에 따라 추가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따라서 추가 예산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그 효과와 효율성은 극대화됨.

〈참고자료 2〉 2안을 바탕으로 한 (가칭)장애인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가. 조직도



나. 업무분장

- 위원장(장관급 또는 차관급)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상임위원 1인 및 비상임위원 1/2이상 장애인 참여)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 중장기 장애인정책방향 설정 및 개

발, 장애인기본정책·제도 업무 관장, 관계부처간의 업무조정, 장애인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함.

[표] 위원회의 인원과 업무분장

조직분장		업무분장	인 원
장애인위원회		위원회 업무총괄	5명(장관급 1인, 차관급 2인, 사무처장 1인, 비서 1인)
기획조정실	기획과	장애인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	4명 (실장 1인, 과장 1인, 과원2인)
	총무과	조직관리, 인사, 교육, 감사, 서무, 예산, 회계	4명 (과장 1인, 과원3인)
장애인정책실	장애인기본정책·제도과	장애인 관련 기본정책·제도 업무 관장	7명 (실장 1인, 과장 1인, 과원 5인)
	장애인정책·제도조정과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장애인정책·제도 협의 및 조정	4명 (과장 1인, 과원 3인)

※ 장애인정책실에서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의 주된 업무와 장애인정책·제도 조정업무를 관장토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폐지함)

다. 비용추계

- 상기 조직 규모로 운영할 경우 실제 실무부서 인원은 기존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폐지로 인한 인원의 이동 흡수로 충당할 수 있어 위원회 관리직책의 5명 정도 인 원만 신규 재원이 소요됨.
- 따라서 추가 예산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그 효과와 효율성은 극대화됨.

〈참고자료 3〉 2안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p>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p> <p>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 (장애인위원회)</p> <p>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은 장애인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 · 개폐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⑤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 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11조의2 (위원장 · 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p> <p>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현행법	개정안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시민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p> <p>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11조의3 (공무원의 파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장애인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